

OECD 경제정책위원회(EPC)

회의 결과

I. 회의 개요

- 출장지: 프랑스 파리, OECD 본부
- 출장기간: 2018년 11월 10일(토)~14일(수)
- 출장자: 김현욱(경제전망실장)
- 출장목적: 「OECD 경제정책위원회(EPC)」 본회의 참석
- 출장자 활동사항
 - 회의 및 토론에 참여
 - 회의의 상세 내용은 아래에 요약한 내용을 참조

II. 주요 내용

1. 세계 거시경제 동향

[최근 경제상황 및 전망]

- 세계 경제는 현재 정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며(잠재성장률 수준) 성장률은 '18년 3.7%에서 '20년 3.5%로 점차 둔화될 전망
 - 단기적으로는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일자리 확대로 내수 진작 예상됨.

-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기조가 점차 약화될 전망이며, 신흥국 금융불안과 유가상승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.
- 또한 무역규제가 경제심리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, 글로벌 교역도 점차 둔화 추세('18~'20년 연평균 4% 이하 전망)로 무역갈등 심화시 글로벌 경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.

[세계 거시경제 핵심 이슈]

- (무역제재 강화) 무역 긴장도가 증가하고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와 일자리, 삶의 질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여 심각한 비용을 유발할 것
 - 미·중 통상마찰 영향 분석(OECD)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과된 미·중간의 관세조치로 인하여 2020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GDP 0.2%p 감소, 글로벌 교역 0.4% 감소 전망
 - 내년도 5천억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(10% → 25%)시 2020년까지 미국 GDP - 0.4%p, 중국 GDP - 0.4%p, 세계 GDP - 0.4%p, 세계교역 - 0.6%p 영향 전망
- (국제유가의 불확실성 확대)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\$80대에 근접하며 국제유가가 세계경기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2018년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미국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요의 증가와 베네수엘라 공급 감소,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해석

- 유가 상승은 원유수출국과 수입국에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가지나 대체로 세계경기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봄.
- 유가가 2019년부터 5년간 배럴당 20불 이상 추가 상승시 2020년까지 세계교역 1% 감소, 세계 GDP 0.2% 감소 예상
- (금융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) 급격한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시 급격한 자산가격 감소를 동반하면서 경제 전반의 변동성 확대 우려
 -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경상적자, 정정불안 등의 영향으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금융 불안이 심화되면서 신흥국 경제 불안 전이 가능성이 대두됨.
 - 특히 유럽의 경우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불안정성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- (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) 중국 성장세는 올해 들어 점차 둔화되는 추세
 -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, 지방정부 부채발행에 대한 제한, 미국과의 무역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
 - 최근 디레버리징 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급격한 성장둔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, 여전히 높은 기업부채(GDP 대비 160% 수준)는 하방 위험 요인

[정책 권고 및 주요 논의 내용]

- (통화정책) 국가별 경기, 인플레이, 실업률 등 상이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 다양화 필요
- (재정정책) 최근 몇 년간 유지되어 온 확장적 기조가 향후 2년간은 중립기조로 전환될 전망
- (구조개혁) 준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유지하고,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장기 성장악화를 방지하는데 필수적
- (최근 주요 이슈) 양호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,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의 상승은 더딘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됨.
 - 필립스곡선의 물가지수와 실물 경제지표간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 관심이 필요
 - 더불어 최근 몇몇 신흥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금융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 필요
- (리스크) 각국의 정부부채 증가,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, 불평등의 확대 등은 향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
 - 각국의 높은 정부부채 수준과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향후 정책 여력이 축소되고,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
 - 상호간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양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시 전세계 후생 저하 우려

- 예상보다 더딘 삶의 질 향상 및 불평등의 악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걸림돌

2. 주요 경제권별 거시경제 상황

(1) 미국

- 미국경제는 '19년까지 3%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거나, 2020년부터 둔화될 전망(2018년 2.9%, 2019년 2.8%, 2020년 2.1%)
 - 임금 상승에 기반한 소비는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이나, 글로벌 경기침체, 통상분쟁 등은 경제성장의 제약요소로 작용
 - 올해 성장률은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2.9% 성장이 예상되며, 낮은 실업률 (2018년 3.9%)과 임금 상승으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확대로 이어짐.
- 인플레이션이 목표치(2%)에 근접하고,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적
 - 최근의 조세 개혁은 기업투자를 촉진하나, 생산성 향상은 부진한 모습
- (고용) 최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여전히 다른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필요
- (재정) 2017년 이후 재정지출 확대·세재개혁(감세)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필요

- (통화정책) 물가상승률이 목표치(2%) 접근하면서 통화정책은 긴축으로 전환중으로 연준은 2019년 말까지 금리를 인상(3.5%까지)하고 2020년까지 유지할 전망
- (금융) 지속적인 확장 통화정책으로 자산가격 및 기업부문의 레버리지가 상승하고 있어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(예: 경기대응완충자본) 필요
- (전망)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감소하고,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
 -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대외 수요 약화, 저축감소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
 - 수출·투자에 장애가 되는 통상분쟁·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
 -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며, 인플레이션 상승시 즉각적인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
 - 비금융 기업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이므로 금융개혁을 금융 안전성을 고려하며 신중히 추진될 필요

(2) 유로지역

- 유로지역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, 노동시장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, 투자 등 내수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 유지
 - 실업률 하락, 경제활동참가율 상승,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등 노동시장 개선 지속

- (소비) 고용 증가 등으로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고 투자도 완화적 금융여건, 생산시설 확장 수요 등으로 호조 지속
- (수출) 2017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,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
- (물가) 물가상승률은 일시적으로 ECB목표치(2%)를 상회하였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1% 내외 수준 지속
- 유로지역 경제는 2018년 2.0%, 2019년 1.9%, 2020년 1.6%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ECB는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여 2020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0.4%(현재 0.0%)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
 - 물가는 임금상승률 확대와 유희생산능력 축소 등으로 인해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
- 다만 무역갈등 심화,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 등이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잠재
 -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과 교역규모가 큰 일부 국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
 - 과다채무국들의 경우 국채시장 불안이 재연되거나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차입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

(3) 일본

- 일본 경제는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 유지하는 모습

- 금년 중 성장률은 기업수익성 개선, 노동부족현상 심화 등으로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실질임금 회복 등으로 소비가 개선흐름을 나타내면서 1%를 소폭 상회할 전망
-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으로 성장세가 일시 주춤할 수 있으나 정부의 재정조치, 동경 올림픽 관련 수요 등으로 증세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상쇄될 것으로 예상
- (재정정책) 일본의 국가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흐름을 제약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
 - 국가부채가 226%(GDP 대비)로 상승한 가운데, 기초재정수지 적자도 3%(GDP 대비)를 기록하면서 일본 정부는 당초 목표했던 흑자전환 달성시기를 연기(FY2020 → FY2025)
 - 향후 소비세율의 점진적 인상과 더불어 사회복지지출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
- (통화정책)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이 달성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
 - CPI상승률(신선식품 제외)이 0%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2020년까지는 장기국채(10년물) 금리를 0%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
- (구조개혁)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유지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필요

- 고령층, 여성, 외국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년 연장, 성별 임금격차 해소, 체류기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
- 일본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,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금융·세제지원 등 '신경제정책 패키지'를 통해 생산성 제고를 도모
 - 현재 연 1% 내외인 생산성 증가율을 2020년까지 연 2% 수준으로 높인다는 일본 정부의 생산성 제고 정책 패키지를 2017년 말 발표

(4) 신흥국

-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기초발표를 통해서 리스크 선호가 축소되는 등 국제금융시장 추세전환에 따라 신흥국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
 - 증가하는 리스크에 대응하여 인플레이션 안정, 정부부채 축소 등 거시경제 건전성 유지, 충격완화장치로서 신축적 환율제도 유지, 구조개혁 추진 등이 필요
- 높아진 리스크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일부 신흥국은 자국의 상황과 정책대응을 소개하였음.
 - 칠레는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가 단일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
 - 브라질은 심각한 경기부진에서 벗어나 노동과 신용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기 개선을 지속하고 있음.

- 인도는 2/4분기에 성장은 8.2%, 인플레이션율은 목표 4%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는 등 안정적 성장을 지속
 - 대외부문 지표인 환율변동, 경상수지적자도 대체로 감내할 수준이며 국내의 은행산업이 건전

3. 임금과 생산성간 탈동조화 현상

- 중위임금과 노동생산성각 격차를 살펴봄으로써 노동소득 분배율(평균임금/노동생산성)의 하락과 임금불평등(중위임금/평균임금)의 확대를 분석
 - 실질임금이 산출 단가로 표현될 때, 실질 평균 임금 상승률과 노동 생산성 증가량의 비례 관계는 노동 시장 점유율의 하락으로 이어짐.
 - 반면, 실질 임금 상승률과 실질 평균 임금 상승률의 괴리는 임금 불평등의 부분적인 척도로 해석될 수 있음.

(1)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원인

- 기술진보와 글로벌가치 사슬의 확장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을 유발하였으나 국가 간 기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.
 -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국가에서는 그 하락이 주로 프론티어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음.
 - 프론티어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수준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데다 노동 생산성의 상승도 두드러지게 빨랐기 때문

(2)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방안

-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고, 노동자가 기술을 보존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.
 - 기술투자로 인한 신기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본이 고속련 노동력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공공 정책과 제도를 통해 기술 진보의 이득을 근로자와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음.
- (경쟁촉진법)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는 시장 개혁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간 임금격차를 증가시켜 제품 시장 비용을 압박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
- (최저임금제도) 최저임금이 낮거나 고용 보호 규정이 취약한 경우, 최저 임금 인상이나 고용 보호 강화로 임금 불평등에 대한 제품 시장 개혁의 불리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음.
- (노동자 단체 교섭권 강화)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동 시장 정책은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 점유율을 높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킬 수 있음.
 - 그러나 경쟁촉진법, 최저임금제도, 노동자 단체 교섭권 강화 등의 방안은 노동에 대한 자본상대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.
 -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.

(3) 주요 논의 내용

- 많은 국가는 생산성 향상이 소수의 프론티어 기업의 높은 수익률 및 고배당으로 이어짐을 지적
 - 특히, 깃 경제(Gig Economy)나 4차 산업혁명, 디지털 경제 또한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음.
 - 일부 국가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이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이나 노동교섭권 강화 등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
- 미국은 생산성과 임금 감의 측정 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(Measurement Problem)를 지적
 - 생산성은 총(Gross) 개념인 것에 비해, 임금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외한 순(Net) 개념을 사용하여 왜곡 발생 가능
 - 이에 OECD는 임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측정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 답변
-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OECD 보고서에 동의하지만, 정확한 정책처방을 위해서는 생산성과 임금 간의 괴리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